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한국에 사는 난민들이 삶에 대해 말한다

관련 기사 12~13면

경찰 개혁,
허구다

2면

이준석이 우파 혁신?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3면

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4~5면

21세기의 저항자에게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한다

6~7면

가후 위기 부정론
반박

8~10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특집

12~13면

노동자 투쟁

초등 돌봄전담사 16면

택배 노동자 15면

김승주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그런 개혁들로서 힘이 강화된 것은 경찰이다.

지난해 경찰법 등 여러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약화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경찰의 규모도 더 커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경찰개혁’으로 내놔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서 정부는 홍보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찰이라는 의미로, 경찰본연의 성격과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있는 변화라고 볼 수 없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기존 경찰 조직을 쪼개서 자치경찰을 신설하고, 지자체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5급 이하 인사권 일부(승진, 전보)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게 되는데, ‘자치’경찰이라는 말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임을 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을 국가로부터 독립시킨다는 구상은 모순이고 공상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형태가 어떻든 간에 국가라는 중앙집권적 권력의 일부이자 그것을 수호하려고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가장 지역분권화된 경찰 제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역·기초 단위에 이르기까지, 시정부 산하 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경찰(자치경찰) 2만여 곳에 도입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것도,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시위를 일선에서 진압한 것도 모두 지역경찰이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예산 삭감 또는 경찰 폐지를 요구할 정도로 분노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발달했다고 알려진 프랑스에서도 노란조끼 시위가 분출했을 때 국가경찰과 함께 자치경찰이 ‘시위자들의 악탈 행위를 막는다’는 치안을 명분으로 폭력 진압에 동참했다.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폴리싱”(지역사회 친화적 경찰 만들기)이 일부 지역에 도입됐다. 그러나 2001년 요크 지역에서 이뤄진 한 연구는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오히려 범죄 발생이 늘었고,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경찰에 대해 대중의 불만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시위 참가자들을 채증하고 협박하는 경찰

2019년 12월

경찰 개혁, 하구다

공권력 — 정말 모두를 위한 권력인가?

사람들은 경찰이 주민신고나 민원에 빠르고 유능하게 대처하면 ‘웬일이래?’ 하고, 무능하게 대처하면 ‘그럼 그렇지, 쫓쫓’ 한다. 또, 경찰은 범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온상으로 악명 높다. 부패, 성범죄, 인종차별, 살인진압 등.

이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범죄 피해를 줄이려면 경찰이 필요하고, 오히려 경찰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상식도 공존한다.

그러나 경찰 행위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계급적 편견과 편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의 집에 강도가 들어 전 재산 500만 원을 훔쳐간다면 그 노인이 입는 피해는 부자들이 수억 원을 코인 투기로 날린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피해액이 적다고 우습게 보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해도 상급기관이나 언론에서 비난받을 일이 별로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무능·무관심에도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일에 대한 무시가 반영돼 있었다. 한강변 대학생 사망 사건에 뒤늦게 인력을 투입한 일도 마찬가지다. 반면, 권력자를 대할 땐 사뭇 다르다. 경찰은 올해 초 이용구(당시 공수처장 유력 후보)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덮어 주려고 택시 기사의 증거를 없는 셈 쳤다.

경찰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지켜 줄 것이 더 많다고 여긴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자·권력자들의 사유재산과 그들의

권력 유지를 뒷받침하는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는 하층 계급에 대한 편견으로도 표현된다. 경찰은 2010년 부산 여대생 납치·강도 및 성폭행 용의자 수배전단에서 용의자 인상착의를 “노동자풍”이라고 썼다가 시정한 적도 있었다. “노동자풍”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경찰은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형 인간으로 지목한다.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는 곳도 거의 대부분 노동계급 또는 이주민 거주지다.

경찰의 하층 계급에 대한 적대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때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진압할 때다.

편견과 적대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지만, 그 주민이 국가 권력에 도전하기 시작하면 인정사정없는 태도로 돌변해 범죄자로 취급한다. 폭력을 동원하고 때로는 ‘주민’을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2005년 농민 집회에서 두 명, 2009년 용산참사에서 다섯 명, 2015년에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2005년 당시 경찰청장은 살인 진압에 정부가 형식상 사과한 것조차 못마땅해 하며 항의성 사표를 냈다.(그리고는 나중에 코레일 사장을 지냈다.) 2009년 용산참사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도 사퇴 후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내고 당시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2015년 진압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장 구은수는 사퇴 후 재판에 기소됐는데도 경찰공제회 회장을 지냈다.

2009년 쌍용차 파업에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진압 작전을 펼친 경기경찰청장 조현오는 얼마 뒤 경찰청장이 됐고, 3년 뒤 경찰청은 3년간 최고의 사건 5위로 쌍용차 파업 진압을 선정했다.

국가와 경찰 기구는 이런 식으로 개별 경찰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계급 편향적 행동들을 지시한다.

경찰이 지배계급 편향적인 이유는 단지 사회 구조를 사후적으로 반영해서만은 아니다. 경찰은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지배 도구로서 고안됐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도 경찰 구실을 하는 기관들이 늘 존재했다.

자본주의 사회 초창기에 부르주아 계급과 국가는 노동계급을 통제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대중의 큰 반감을 일으켰다. 근대 경찰은 그 대안으로서 등장했다.

가장 발달한 산업 사회였던 영국의 런던시 경찰은 19세기 중엽 차티스트 운동(영국에서 벌어진 최초의 노동계급 대중운동) 직전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투쟁하기 시작했을 때 탄생했다. 당시 경찰은 특수 경찰관을 10만 명이나 총원해 대도시 곳곳에 근거지를 두고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한국 경찰의 기원은 일제 시대 경찰에 있다. 미군정은 일제 총독부가 물러난 자리에 새 국가기구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경찰 기구를 재조직했다. 여기에 해방 직후 도망간 친일 경찰들을 불러들였다.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고안됐던 일제의 경찰범죄처벌규칙은 해방 후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경범죄처벌법으로 제정돼 경찰의 무기가 됐다.

그렇더라도, 경찰이 없는 사회는 범죄와 무질서로 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만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지배자들에게 이로운 관념이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위로부터 강하게 통제돼야 한다는 생각 또는 두려움은 국가나 경찰의 강제력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부추긴다.

경찰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줄이지도 못했다. 예컨대 2005년부터 한국 경찰 예산은 두 배 가까이, 인력은 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국방부 전체가 52조 원 예산을 쓰는데, 경찰청이 1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쓴다. 하지만 강력범죄 검거율은 늘 75퍼센트 안팎이다. 일반 절도 같은 민생 범죄 해결률은 더 낮아서 50퍼센트대다. 그러나 치안 유지를 방자한 시위 대응에는 언제나 신속·정확하다.

강력범죄

범죄는 언제나 특정 사회 조건의 결과이다. 범죄의 수나 양상이 지역마다, 시기(시대)마다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초 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강력범죄는 준 반면 생활고형 범죄가 증가했다. IMF 직후인 2000년에도 전년 대비 절도사건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었다.

오늘날의 범죄들은 압도적으로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조건에서 비롯된다. 주기적인 경제 위기로 실업과 빈곤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착취의 고통과 경쟁에서의 실패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중 일부는 심각하게 좌절해 뒤틀린다. 모든 것을 돈을 잣대로 평가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소유 의식으로 축소시키는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와 성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대중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들은 대부분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벌이는 것들인데, 그런 범죄들의 배경에도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문제들이 있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의 강제력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인류 역사의 더 많은 부분은 국가와 계급이 없는 사회였다.

마르크스는 국가의 존재는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사회처럼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고 통제해야 하는 사회에서 지배자들은 경찰 같은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불평등과 경제 위기, 차별과 억압 등 자본주의가 안겨 주는 고통들은 노동자·대중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투쟁에 나서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들에게는 이를 제어할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를 줄이려고 1퍼센트의 시간을 할애한다면, 나머지 99퍼센트의 시간은 그러한 범죄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체제를 보호하는 데 쓴다.

경찰은 지배계급이 휘두르는 ‘몽둥이’이고, 개혁해야 할 필요약이 아닌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이준석이 우파 혁신?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김문성

“85년생 이준석”이 노회한 중진 정치인들을 제치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기성 언론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 말한다.

젊은 나이와 능력주의, 안티 페미니즘 같은 이준석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는 언론도 있고, 이준석이 우파 진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언론도 있고, 트럼프처럼 우익 포퓰리스트라는 평도 있다. 어쨌거나, 이준석 당선으로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흔하다.

그러나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이준석 현상’ 때문에 딱히 20~30대 청년층의 지지가 국민의힘으로 쏠린다는 근거는 없는 듯하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퍼센트나 앞섰는데도 3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더 많았다. 한국갤럽 최근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 모두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가 살짝 높았고, 무당층이 민주당 지지보다 많았다.

이미 4월 재보선에서 20대가 국민의힘에 더 많이 투표했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떠올려 보면,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박근혜 퇴진 이래 딱히 ‘이준석 현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준석 돌풍은 윤석열 부상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당명을 세 번이나 바꿨는데도 우파 야당은 올해 4월 재보선 전까지 분열된 지지층을 통합시키지 못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사퇴



6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이준석 이준석 ‘돌풍’은 그 개인의 개성 덕분이 아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보여 준 윤석열 부상의 부산물이다

하고 반(反)문재인 우파 후보로 대선에 나갈 확률이 높아지자 그때서야 지지층이 재결집했다. 조국 사태 이후로 정부·여당의 개혁 배신, 부동산 정책 실패, 위선, 부패 등으로 대중의 환멸이 극에 달했을 때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극우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당의 이미지를 관리한 덕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당 내에서도 아니라 바깥에서 정권

교체의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지지층의 변화 압력이 강해진 것이다. 이준석의 경쟁자였던 나경원은 연전연패의 리더 이미지가 강했다.

이준석이 새로운 세력이나 정치 노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준석의 트레이드마크라는 능력주의도 엘리트주의와 개인주의를 고취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고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우파 혁신

을 말했던 자의 하나였는데, 그들은 결국 국민의힘으로 되돌아왔다.

우경화하는 공식 정치

오히려 주목할 것은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2017~2019년 정치적인사 상태에서 태극기 우익의 동원력에 힘입어, 사기가 떨어진 집토끼를 쫓기며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준석

과 유승민 등 박근혜 탄핵·탈당파들은 굴욕을 감수하고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갔다.

지금 우파의 변신은 강성 우파의 재결집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태극기 우익 사이에 갈등이 있겠지만, 우파 진영의 주도권은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 한국 우익은 전통적으로 기존 국가에 의한 권위주의를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강성 우파 정권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 지배계급은 중도적 정치 안정을 이뤄 경제 회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트럼프의 집권과 패배 등 미국의 정치 불안정도 교훈 삼았을 것이다.)

그 때문에 우파 정당이 중도연하고, 윤석열처럼 자신들을 궁지에 몰았던 검사 출신자를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려 한다. 민주당 양정철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능숙한 아마추어’가 많다고 했는데, 국민의힘과의 비교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그러나 장차 경제·안보 위기가 더욱 심화돼 정치 양극화가 더 두드러지거나, 우파가 정치적 우위를 되찾으면 우파 속성은 다시 발현될 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를 이력저력 관리한 덕에 한동안 정치 안정을 이루고 지배계급의 지지를 받았다.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지배계급의 지지가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돌아갈 조짐이 있자, 우파와 기업인들에 대한 아부를 늘리고 있다. 우파가 중도연하지만, 실제 공식 정치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

우파의 바뀌지 않은 본질

우파는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적인 야만적 본성을 좀 더 일관되게 대변하려는 정치 세력이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남한 국가의 기원인 5·16 군사반란을 시작점으로 잡아도 60년 중 46년(77퍼센트 기간)을 집권한 확실히 자리잡은 지배계급 정당이다.(민주당은 새로운 경쟁자인 또 다른 지배계급 정당이다.)

1987년 6~8월 대중 투쟁이 강요한 ‘(부르주아적) 민주화’ 이후만 보더라도 대선 7번 중 4번을 승리했고, 그때마다 다수당 정부였다. 총선 9번 중 6번 제1당을 차지했다. 1997년 최초의 정권 교체 전까지는 한국 공식 정치를 지배했고, 그 뒤로도 핵심 지배계급 정당이었었던 것이다. 주류 정치인 모두 거짓말을 잘하지만, 오랜 집권당답게 변신에도 능하고 통치 기술과 노하우가 발달해 있다. 거짓말과 변신이 잘 통하게끔 뒷받침해 줄 언론·지식인 등의 기반도 충분하다. 이준석으로 표상되는 변화 정도는 새로운 게 아니다.

그들은 1987년 6월항쟁을 제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재빨리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며 항쟁이 더한

층 급진화하는 것을 막았다. 이후 야권 분열 틈을 보며 정권을 연장했다. 노태우 정부는 반독재 야당 출신 김영삼의 당과 합당해 국가의 기반을 재강화하고 면모를 혁신했다. 마지못해서였겠지만 5·18 광주 항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했다.

김영삼은 몇몇 온건한 운동권 출신자들을 영입했다. 당시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마지막 대선을 준비하던 김대중은 추미애 같은 인사의 영입을 통한 온건 이미지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었지만 말이다.

이준석의 탄핵 인정 발언을 계기로 박근혜와의 단절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노태우는 친구인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 보냈고, 김영삼은 전임자인 노태우와 전두환을 구속시켰다.

이명박은 “중도 실용”과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당내 경선에서 당 주류인 박근혜를 제치고 대통령이 됐다. 그다음 대선에서 박근혜도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같은 흰소리를 하며 집권했다. 대선 기간에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사과하기도 했다. 박근혜는 남북 화

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2002년에는 남북해 김정일과 회담을 한 적도 있다.

박근혜는 우파를 결집하며 집권했지만 2016년 그의 탄핵에는 당시 집권당 의원 거의 절반이 참여했다.

민주당이 최근 전국 선거를 네 차례나 연속으로 이겼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지배계급 정당 중 하나임을 다시금 보여 줬을 뿐, 국민의힘의 기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반공주의의 시효가 다했다?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변신을 해 왔지만 대기업들과 국가 관료를 기반으로 삼는 계급적 본질은 바뀐 적이 없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본가 계급의 독재라는 본질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우파는 분단-냉전과 대한민국 건국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친미·반공을 기조로 미국식 자유시장 질서 편입을 추구하면서 정치 이데올로기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표방했다. 오늘날 한국 국가의 표준적 이데올로기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다.

한국 우파의 반공주의는 한국 우파

의 고유한 특징이라거나 단지 낡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검찰 공안부, 안보지원사(옛 이름은 보안사, 기무사), 국가보안법, 형법의 내란죄 등 노골적인 억압 기구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자유주의자들이 집권해도 국가 운영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태극기 우익은 박근혜 퇴진 운동 때 촛불운동 진압을 위한 군부 쿠데타를 청탁했는데, 실제로 그 전에 이미 기무사 중심의 친위 쿠데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후에 드러났다. 2012년 대선 개입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인터넷 여론인 줄 알았는데 실은 국가 기관이 동원돼 벌인 색깔론 여론전(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심리전)이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국가보안법 사건도 박근혜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합작으로 진보당 정당 해산으로 이어졌다.

이런 노골적 억압 기구들은 적용이 뜸해진 듯해도 훼손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준석 당선을 두고 “이제 이 나라에서 반공주의의 시효가 다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해나 착각이다. 경

제 침체와 안보 위기 등으로 저항 세력을 단속할 필요가 도리어 커지는 마당에 말이다.(한 달 전 문재인 정부가 범민련 간부 두 명을 기소한 사실을 알아야 하고, 1년 전 〈경향신문〉 편집인이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다’는 칼럼을 써야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김영삼은 집권 첫째 민주개혁이라며 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권을 없앴지만, 경제 위기 직전에 국회 날치기로 안기부 수사권을 되살렸다. 지금 문재인은 그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을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고 있다. 처음부터 경찰과 국정원의 안보 수사는 연결돼 있었는데 말이다.

이미지 정치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준석의 개성이 가미되긴 하겠지만, 그의 정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한국 사회 구조와 제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지배계급 인물들과 그 네트워크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정치와 사회가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그들의 ‘사상’에 의해 이끌려 나아간다는 생각은 이준석의 엘리트주의를 사실상 공유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관념론의 발로일 뿐이다.

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이현주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의 당선은 ‘청년 정치’의 새바람을 알리는 걸까?

이준석은 예나 지금이나 엘리트주의와 무한 경쟁을 옹호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용만 할 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차별과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보수 반동자일 뿐이다. 그는 10년 전 본지 김지윤 기자와의 ‘맞짱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이 재도전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도 양질의 인재들이 오지 않는다 ... 너무 다수에게 혜택을 주려 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것 ... [청년들이] 재도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심각하게 노력해야 한다.”

이준석은 당선 전에 ‘안티 페미니즘’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며 20대 남성 전체(사실은 일부인데도)를 대변하는 행세를 했다. 인상에 좌우되길 잘 하는 사람들은 그의 부상이 일각의 안티 페미니즘 정서를 넘어 20대 남성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준석은 보수적인 일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고, 그의 당선은 이들을 더 고무할 것이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20대 남성들은 남성 개인들을 공격하는 데 열심인 일부 페미니스트들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긴 해도, 성평등 가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관련 기사 본지 366호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즘인가’)

이준석이 청년들의 실제 정서를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년들이 이준석을 안티페미니즘을 이유로 지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준석의 등장은 대선에서 승리해 보겠다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집권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새로운 간판을 달아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는 50대 후반 ~ 70대 꼰대 남성”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것이다.

이제 두루 인정되다시피 이준석을 앞세워 우파가 떠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와 환멸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분노는 지난 재보선에서 굴절돼 표현됐다.(관련 기사 본지 363호 ‘민주당 재·보선 참패: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이준석 현상’도 그 연장선 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역차별?

이준석은 여성 차별의 현실을 사실상 부정하며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당하는 현실인 양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근거 없는 피해의식”으로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을 강요한다고 공격해 왔다.(당대표가 된 뒤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열려 있다는 언급을 하며 이런 편협함을 덮어 보려는 듯하지만 말이다.)

과거에 견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제한적으로 상승한 것은 맞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 경제와 사회에



보수 반동 엘리트주의자 이준석은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용만 할 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 전혀 관심 없다

여성의 기여가 늘어났기 때문이지, 기존 사회의 여성 차별 구조가 사라져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 중간 계급 여성은 일정한 성공을 거뒀지만, 노동자·서민층인 보통 여성의 삶은 여전히 곤고하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 성별 임금 격차는 10년 넘게 OECD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다. 특히, 육아와 가사의 주된 책임도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일생에 걸쳐 겪는 각종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이 겪는 차별이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광범한 비하가 벌어지며 여성들은 성폭력, 성적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다수 여성의 삶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남성의 삶도 고달프다. 노동계급 남성의 처지는 자본가 계급과 상층 중간계급의 여성보다 더 열악하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남녀 노동계급 모두에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자 여성 차별이 남성 노동계급 탓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지, 여성 차별이 없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파 영향력 키우기

이준석을 앞세운 우파는 체계적인 여성 차별의 현실을 부정하므로 페미니즘에 적대적이다. 그런데 이들의 페미니즘 공격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불만을 품은 청년들을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성 개인들 공격에 열을 올리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는 것이다. 페미니즘 사상은 급진적인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 계급이 아니라 젠더에 있다고 보며 남성 일반을 여성 일반에 대한 지배자·권력자로 여긴다.

그래서 흔히 남성 개인들을 공격하거나, 일상의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에 몰두하는 실천을 해 왔다.

편견 섞인 말과 표현, 행동들을 도덕주의적으로 규탄하는 것도 이런 실천의 일부였다. 심지어 성차별적 함의가 없는 데도 여성 혐오로 낙인 찍기도 했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우파는 페미니즘의 이러한 일부 측면을 페미니즘 전체로 확대해석하고, 페미니즘을 할당제 같은 정책 하나로 환원한다.

우파의 페미니즘 비판에는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여성운동 지도자들의 개량주의적 무기력도 활용된다. 이는 이들이 서민층 남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이용해 진보·좌파 전체를 악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 준다. 그렇게 해서 우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파들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의 개선에는 무관심하면서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일 뿐이다.

우파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청년들을 포섭하려 애쓰는 상황은 문재인 정부 왼쪽의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최근 들어 정부 비판이 더 강화되긴 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정의당·진보당 같은 진보정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단결된 대중 저항을 건설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커다란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정치적 존재감이 크지 못한 실정이다.

만성적 경제 불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한 번 낙오한 결과도 더 안 좋아졌다.

그리고 소외와 파편화가 심화되는 조건 하에서 오늘날 젊은 세대는 집단적 투쟁과 조직 경험의 부족, 피상적 인간관계, 개인주의·능력주의라는



3년 전 남성잡지 <맥심> 표지 모델로 나온 이준석 2015년에 이 잡지는 여성 남치·살해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한 화보를 표지로 내보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압박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대중 투쟁이 더 확대되고, 급진적이 되고, 좌파적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특징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과 결합돼 우파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수도 있다.

여혐 vs 남혐 그만

여성 평등을 향한 사상과 실천으로서 페미니즘은 차별 현실을 개선하려는 진보적 운동이다. 이 운동 안에는 여러 조류가 있고 강조점과 방법도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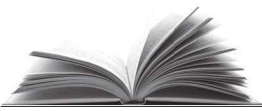
한국에서 현재 우세한 급진 페미니

즘 경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천대에 맞서고자 하는 좋은 의도의 사상과 운동이지만, 이론적·정치적으로 결함이 많아 잘못된 분석과 전략·전술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실 보수 남성 청년들의 ‘남혐’ 제기는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사용해 온 방식의 거울 이미지다.

최근 어느 페미니스트는 이준석과 논쟁하면서, ‘남혐’ 제기를 하는 이들을 두고 ‘남혐 제기가 확증편향이고, 동기를 봐야 하며, 젠더갈등을 부추기

▶ 5면으로 이어짐



서평 |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전주현

낙태죄가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는 여전히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책이 나왔다.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이하 《선택》)은 프랑스인 저자들이 1970년대 프랑스 낙태권 투쟁을 배경으로 낙태 문제와 저자의 삶을 엮어서 서술한 그래픽 노블(만화 소설)이다. 인상적인 그림과 독특한 서술 방식이 어우러져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하다. 쉽고 생생한 이야기에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

이 책은 1970년대 프랑스를 달군 낙태권 운동과 역사적 사건들의 특징을 잘 짚어내 감각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저자와 지인이 참가했던 ‘낙태와 피임의 자유를 위한 운동 (MLAC)’의 용기 있는 활동과 열정을 그린 것도 흥미롭다. 1973년에 결성된 MLAC는 페미니스트, 노동조합 활동가, 급진 좌파들이 포함된 공동 활동 단체였다. 기층에서 토론회, 시위 등 운동을 조직했고,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지원하기도 했다. 노동자 파업 연대 활동과 군사기지 확장 반대 운동에도 적극 참가했다. 저자를 포함해 낙태 불법화로 인해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고통을 묘사한 장면들은 분노가 치밀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나의 자궁은 나만의 것이고 어떻게 하든 나의 자유입니다”라는 팻말 문구가 가슴 깊이 박히는 이유다.

이 책의 장점 하나는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처럼 평범한 남성들을 싸잡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애는 둘이서 만들었는데, 나는 살았



1973년 프랑스에서 무료 피임과 낙태 시술을 요구하는 시위에 함께 참가한 사람들

고 아내는 죽었다”며 불법 낙태로 아내를 잃은 남편이 “죄책감”을 토로하는 장면은 가슴이 먹먹하다.

한 여성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남자가 자기 여자가 날림으로 애를 떼든 말든 개의치 않는 마초 쓰레기는 아니에요! 1970년대 낙태 합법화 시위 때도 여성들과 함께 싸워준 남성들이 있었어요.”

이 책은 낙태 문제에 계급 불평등이 아로새겨져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1972년의 ‘보비니 재판’ 사건이 그렇다. ‘보비니 재판’은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16세 소녀가 불법 낙태로 기소됐다가 운동의 압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소녀의 어머니도 기소당해 재판을 받았다. 소녀의 어머니는 이혼한 후 혼

자 딸 셋을 키우는 여성 노동자였다. 불법이어도 낙태 시술이 가능했지만 비용이 엄청났다. 전문 시술자에게는 어머니 월급의 세 배를 내야 해서,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른 시술자를 소개받아 한 달치 월급에 육박하는 비용을 치르고 딸이 낙태 시술을 받게 했다.

소녀의 어머니는 불법 낙태 현실을 고발하며 법정에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네들 법이 유죄입니다.”

재판은 비공개였지만 법정 밖에서 열린 낙태권 옹호 시위대의 당당한 외침은 법정 안까지 울렸다.

“부자집 여자들이 손쉽게 낙태 시술을 받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늘 가난한 여자들만 피를 본다”는 여성 활동가의 주장은 날카롭다.

“악착 같은 투쟁” 덕분에 드디어 1974년 11월 29일, 프랑스에서 낙태 부분 허용 법안이 통과됐다. 저자는 활동가들의 말을 빌어 이 법안이 투쟁의 성과이고 일보 전진인 것은 맞지만,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한다. 임신 10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고 사전 면담을 의무화하는 등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나중에 프랑스 정부는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2주 이내로 짧끔 늘렸고 오늘날까지 이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낙태 허용 기간을 놓친 많은 프랑스 여성들이 종종 다른 나라로 원정 낙태를 간다.

이런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낙태 관련 대체 입법이 이뤄지면 주류 정당들은 낙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지음
이세진 옮김,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선택》에서 강조하듯, 낙태는 “여성의 기본권”이므로 “낙태 완전 자유와 무상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낙태권 운동이 전진하려면,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1970년대 프랑스 낙태권 운동이 ‘68반란’과 대규모 노동계급 투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낙태권 운동은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대중운동을 지향해야 한다.

《선택》이 프랑스 낙태권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책 곳곳에 녹아 있는 낙태권 지지 활동가들의 명쾌한 주장은 청량감이 있고, 대체로 유용하다.

낙태가 여성의 법적 권리로 인정되기를 염원하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4면에서 이어짐

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다. 그동안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종파주의적 실천을 동기를 근거로 정당화해 왔는데, 그런 실천의 효과도 성찰해 봐야 한다. 여성운동 일각의 여성혐오 낙인찍기와 개별 남성 규탄은 충격 요법을 통해서라도 대중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극소수에게는 각성 효과를 났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비춰 보면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도덕주의적으로 평범한 남성(청년)들에게 여성혐오 낙인을 찍는 방식은 불가피하게 반감을 키웠고, 불필요한 분란과 소모적 논쟁, 쓰라림을 낳았다.

이런 점들을 발본적으로 돌아보아 우파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효과적인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다.

이간질에 맞서기

실업과 구조조정, 임금 삭감,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보육 지원 등 오늘날 구직 청년을 포함해 노동계급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 차별에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어느 한 성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그 정부이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이다. 불황 때문에 지배자들의 고통 전가 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노동계급 남녀 모두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돌봄과 양육 부담 등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며 여성들에게 더한층의 희생을 강요한다.

노동계급이야말로 그 남녀 구성원이 단결해야 유리한 사회 세력이다.

그러려면 노동계급 운동은 여성 차별에 효과적으로 맞서야 한다.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지배자들에 맞서 단결하고 각종 성소수자도 포함된 단결 투쟁이 전개될 때 의식 변화도 가능해진다.

물론 현실에서 노동계급은 여러 차별적 관념이나 경쟁으로 말미암아 종종 분열하고, 단결이 요원해 보이기도 한다.

노동조합 상층의 지도자들은 급진적이고 좌파적이고 전투적으로 기층 노동자들을 조직해 효과적인 투쟁을 건설하는 데는 소심한 편이다. 대부분, 집회에서 연설 기회를 얻고, 연대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진보정당

들의 입법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의 공중전과 형식적 대응에 그친다.

심지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조차 정규직으로부터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 관심이 없거나 수동성과 무능력을 드러낸다. 대놓고 부문의 이익만 옹호하기도 한다. 전교조 지도부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외면한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일 등이 그런 사례다.

이는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데서는 단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운동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가진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몇 년 전 가톨릭 교회의 영향이 강한 아일랜드에서 낙태가 합법화됐는데, 급진좌파들(특히,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이다’ 연합)이 낙태권 운동에서 중심적 구실을 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노동계급의 반긴축 투쟁에 관여하며 대중 시위를 조직하고 좌파적인 정치적 주장을 폈다.(관련 기사 본지 250호, ‘현지 여성 사회주의자 기고: 아일랜드 국민투표, 낙태는 여성의 권리임을 천명하다’)

좌파라면 차별에 맞서는 운동에 노동계급 기층 사람들이 더 많이 참가하고 노동계급이 자신의 고유한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 그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인권운동 지도자들, 개혁주의 정치인들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21세기의 저항자에게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한다

다음은 5월 8일(현지 시각)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커밀라 로일이 한 강연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 커밀라 로일은 《빼앗아들을 위한 엥겔스 가이드》의 저자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태어난 지 200년이 넘었다. 수염 덩수룩한 19세기의 두 남자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마르크스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사악한 공산주의의 창시자로 본다. 그래서 20세기 스탈린 치하 소련과 오늘날 북한과 중국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적어도 일부 있다고 본다.

이런 견해는 거부해야 한다. 마르크스가 그 체제를 봤다면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학계에서 마르크스는 경제에 대해 몇몇 좋은 통찰을 내놓고 매우 영향력이 컸던 흥미로운 철학자로 취급된다. 사회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나처럼 지리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마르크스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마르크스는 매우 결합이 많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사상을 가졌던 인물로 치부된다.

한편, 마르크스가 여성 차별이나 제국주의, 인종 차별 같은 문제에 관해 말한 게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럽 중심적이어서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마르크스가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해 다른 것들을 무시한 채 계급만 앞세웠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마르크스가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다 다룬 것은 아니다. 사실 마르크스는 자기가 다루고 싶어 한 문제들조차 다 다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후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어받아 그의 사상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려 했고, 적용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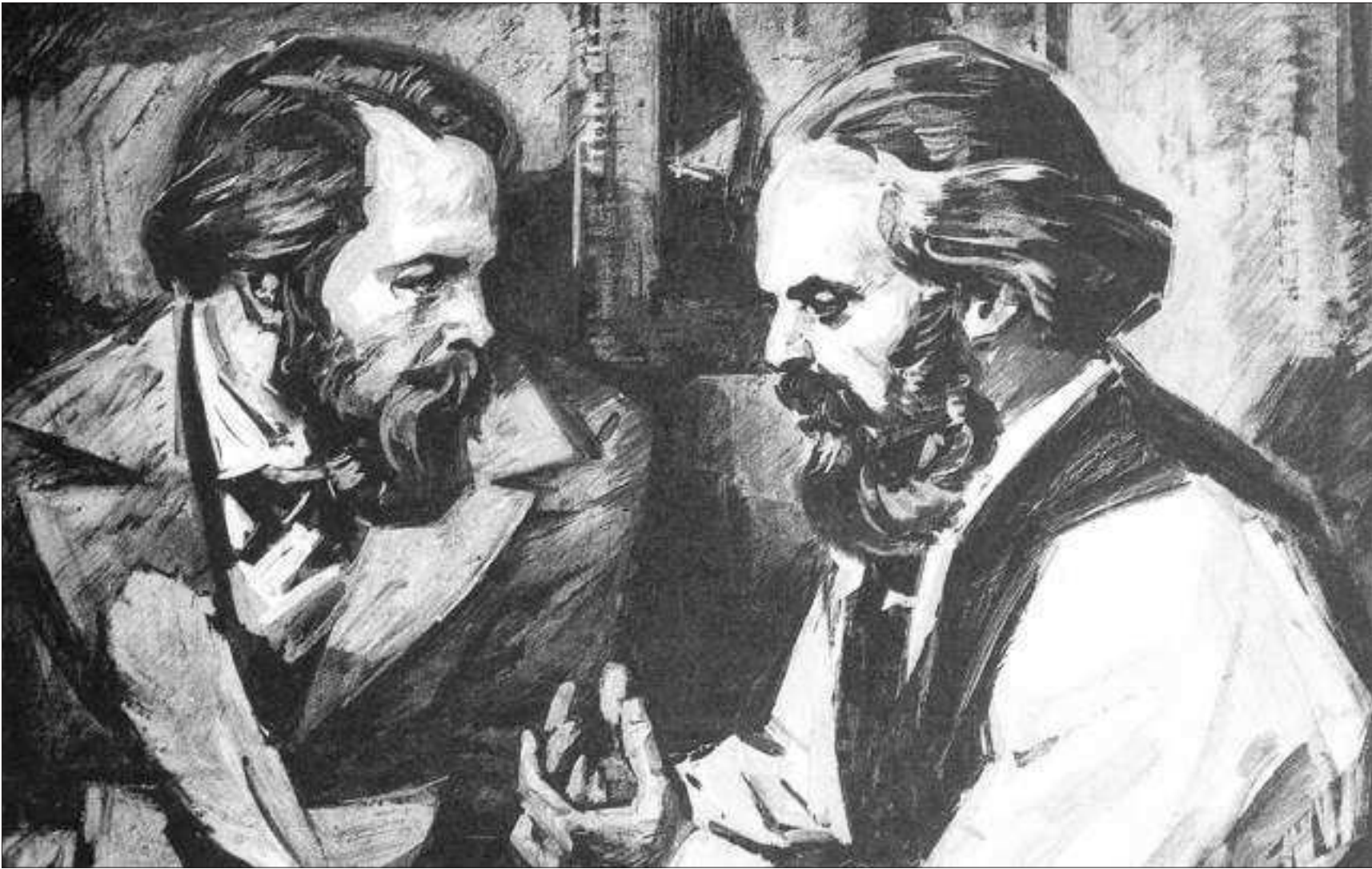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르크스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마르크스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역사유물론이라는 방법과 변증법이라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적용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도 하다.

특히, 마르크스는 그의 걸작 〈자본론〉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착취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위기에 처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엄청난 불평등과 착취가 지배하는 체제에 살고 있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 한 사람이 하루에 3200만 달러를 버는 세상이다. 화성 표면에 탐사 로봇과 드론을 보낼 기술도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제대로 된 산소호흡기가 없어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 나가고, 백신 제조업체들의 이윤이 세계 대다수 사람들의 생명보다 우선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꽤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명하다.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핵심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처지라는 관점

마르크스의 사상을 살펴보자. 우선, 마르크스와 엥겔스, 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의 처지라는 관점에서 이론을 발전시켰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 대 자본가의 대결에서 그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 확고하게 노동자 편을 들었다. 그저 공평무사한 태도로 세계를 관조하려고 하지 않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이러저러하게 해석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둘 다 평생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노동자 투쟁에 헌신했다. 마르크스는 정치 신문 기자로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술레지엔 직조공들의 항쟁에 큰 감명을 받았다. 1844년에 지금은 폴란드 영토 [실롱스크]인 술레지엔에서 수많은 직조공들이 매우 전투적인 폭동을 일으켜 사용자들이 사는 저택과 공장으로 쳐들어갔다. 공장 설비를 박살 내기도 했다. 이는 얼마간 절망에서 비롯한 행동이기도 했다. 임금이 대폭 삭감돼 도저히 먹고살 수 없게 됐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투쟁은 산업 노동자들이 벌인 최초의 중요한 투쟁의 하나였다.

엥겔스도 이와 비슷한 영국 노동자 파업 투쟁에서 영감을 얻었다. 당시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차티스트운동을 벌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혁명에도 참여했다. 《공산당 선언》은 [1848년 혁명을 앞두고 자신들이 속한 공산주의 단체를 위해 쓴 것이다. 당시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자처했다. 1848년 혁명이 유럽을 휩쓸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혁명의 한복판에서 조직 활동을 했다.

훗날 마르크스 장례식에서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뭘니 뭘니 해도 혁명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파업 노동자들의 용기를 찬양하고, 노동자 투쟁 소식을 알리고, 노동자가 겪는 고통에 공감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들이 처한 체제를 분석하려 했고, 노동계급이야말로 자본주의를 타도할 잠재력이 있는 계급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노동계급을 자신들의 노력의 중심에 놓았다.

1840년대 당시에는 중간계급처럼 더 교육받고 합리적인 집단이 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인이 흔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계급 대중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계급이며, 그 잠재력이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역사유물론

그러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자적인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견지했다. 그들의 세계관을 “역사유물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세계관은 단지 권세가들과 권력층의 행위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물론 학교에서 우리는 왕이나 대통령, 통치자, 온갖 지도자가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배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것이 틀렸다고, 일반 대중이 계급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했다.

사회는 사상으로 변화돼 온 것이 아니라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관념론을 몹시 못마땅해 했다. 관념론에 따르면, 사회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면서 변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물질적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조건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일반 대중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생산하도록 어떻게 조직되는가? 바로 이 물음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인간은 먹고 입고 잘 곳을 마련한 다음에야 정치나 과학, 예술, 종교를 할 수 있다”고 엥겔스는 말했다.

이것은 꽤나 생태학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생존 수단을 마련하느냐는 물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생태학적 측면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이론 자체에 내재된 핵심 요소의 하나이다.

한편, 인간은 개인으로서 살지 않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생산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형태로 조직돼 왔다. 인류 역사 동안 다양한 유형의 사회가 존재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보인다. 사회는 늘 이랬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며 대안은 없다는 말을 우리는 듣는다. 그러나 장구한 인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는 최

근에야 등장해 짧은 기간 존재해 왔을 뿐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한 핵심 논점 하나와 연결된다. 그들은 인간 본성을 변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흔히들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어서 사회주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런 특성을 타고난 것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하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는, 인간이 언제나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인간이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존재이므로 인간 본성도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또한 소외에 대해 말하면서,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체제라고 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지지 못한다. 노동의 산물은 그를 고용한 자본가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생산물이 외려 우리 위에 군림한다고 마르크스는 지적했다. 그 생산물은 마치 우리가 생산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낯선 것으로 다가온다. 자본주의는 우리를 인간에게 하는 것인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킨다. 그리고 다른 인간들에게서도 우리를 소외시킨다. 자본주의는 우리를 모두 서로 경쟁하는 개인으로 취급한다.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인식에 따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계급 투쟁이 역사를 전진시킨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일어난 남북전쟁[제2차 부르주아 혁명]을 사례로 보자. 유물론



거대한 불평등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계 하루에 3200만 달러를 버는 아마존 회장 베이조스(왼쪽). 인도에서는 의료 물자마저 부족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오른쪽).

적 관점이 아니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북부와 남부가 전쟁을 벌인 것은 단지 어떤 사상 때문만이 아니었다. 북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제에 반대하기로 마음먹어서, 노예제를 선호한 남부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링컨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제를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결코 아니었다.

남북전쟁은 경제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남북전쟁은 미국이 어떤 종류의 사회가 되어 하느냐 하는 물음을 둘러싼 전쟁이었다. 미국은 플랜테이션과 목화 수출에 기반한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하게 하는 산업 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가? 남북전쟁은 미국 전체가 어떤 형태의 체제로, 어떤 세력에 의해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전쟁이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해 이야기했다.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는 경제적 기초가 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사상과 제도가 상부구조의 일부로 형성된다.

물론 토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론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상과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 당장 지금도 우리는 이 모임에서 사상과 정치를 토론하고 있지 않은가. 유물론적인 역사 이해에 따르면 실제 삶의 생산과 재생산이 역사의 궁극적인 결정 요인이라고 엥겔스는 말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자신이 그 이상을 주장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만이 역사의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는 식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경제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며 경제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마르크스는 경제를 연구한 《자본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1851년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편지를 보내 “연구가 꽤 진척돼 앞으로 5주면 경제학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30년 후 생을 마감할 때도 마르크스는 경제학을 끝내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려 했다. 어디서 비롯했고 어

떻게 작동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아내려 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그 이전의 봉건제와는 매우 다른 사회 체제다. 봉건 영주는 농노에게서 수확물을 거둬들였다. 그리고 자기가 쓸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먹고 쓸 음식과 물건을 사들였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자기가 직접 사용하려고 부를 쌓지 않는다. 자본가는 부를 투자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이다. 자본가는 단지 돈을 모으기만 하지 않는다. 더 많은 돈이 돌아오길 기대하며 사업에 투자한다. 그러지 않는 자본가는 도태된다.

그러면, 자본가는 어떻게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는가? 이것은 마술이 아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준다. 그 대가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얻는다. 노동력은 매우 특별한 상품이다. 노동력이 여느 상품과 다른 점은 가동시키면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는 자기가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얻게 된다.

팬데믹 동안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년 전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다. 출근을 못 하고 임시휴직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휴직 수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기가 크게 추락했다. 이는 사회 상층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로 경제가 굴러가는 게 아님을 보여 준다. 날마다 출근하는 평범한 노동자들이야말로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150년 전에 마르크스도 그렇게 말

했다. “어떤 나라든 노동을 멈추면 1년은 고사하고 몇 주도 안 돼 망한다는 것은 어린애도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노동을 멈추면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자본가는 임금을 깎고 싶어 하지만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고 싶어 한다. 노동자는 자본가와 싸워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는 다른 자본가와도 싸우고 경쟁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늑대인간처럼 잉여 노동을 굶주려 있다”고 했다. 파산과 파멸을 면하려면 다른 자본가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 산업을 보라. 땅속에 있는 화석연료를 이대로 계속 캐내고 태우면 기후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모두들 안다. 아마 그 기업들도 알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지 못한다. 화석연료를 캐서 팔면 막대한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체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다. 그들이 경쟁에 임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다른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마지막으로, 국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가는 내가 앞서 말한 상부구조의 일부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는 정부, 의회, 군대, 경찰, 사법 기구, 복지 체계, 우편 서비스 등 현대 세계의 많은 것을 포함하는 일련의 기구들이다.

우리는 국민 국가 아래 살고 있다. 즉, 국가가 특정 국민과 결부된 사회에

서 살고 있다. 국가는 그 국민 국가 아래 사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들 말한다. 국가는 마치 중립적인 세력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가가 중립적이지 않으며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의 이익을 구현한다고 했다. 오늘날 경찰이 하는 일을 보라. 명백히 지배 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 경찰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이익을 지키고 노동자들을 막는 구실을 한다. 영국 정부는 이제 경찰법을 개악해 시위도 못 하게 하려고 한다. 경찰은 또한 사회의 인종차별·성차별 관념을 모두 수용한다.

제러미 코빈이나 다이앤 애벗 같은 영국의 훌륭한 좌파 정치인들이나 다른 나라의 좌파 정치인들조차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고, 때로는 심지어 경찰을 거리에 더 투입하라고 촉구하기도 한다.

요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성장으로] 경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거나 경찰이 필요하기는 하나 등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인 대부분은 경찰과 국가의 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 계급의 해방이 노동계급 자신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내가 소속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도 그런 관점을 견지한다. 위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스탈린주의 체제[옛 소련 블록]나 정당 [공산당과 달리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는 노동자 자신의 행동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 이

것이 또한 우리와 개혁주의적 좌파의 차이점이다. 개혁주의적 좌파는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잡은 다음 기존 국가를 운영하려 한다. 물론 우리는 선거에서 이겨 국가를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투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를 대리해 사회를 운영할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혁명을 주장한다. 그것은 국제 혁명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한결같은 국제주의자였다. 그들은 세계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며, 계급 투쟁은 국제적 투쟁이라고 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 지배 계급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더 공통점이 많다고 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국민 국가를 지지해야 한다는 사회의 상식을 거스르는 것이다. 최근 영불해협을 저지섬에서 [어업] 분쟁이 벌어지자 영국 정치인들은 국기를 휘두르며 거기에 군함을 투입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지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지배 계급의 이익을 지지하기를 거절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는 혁명의 모습은 노동 계급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하고, 여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는 혁명이다. 그렇다. 노동계급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은 모두를 해방시키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우리는 평등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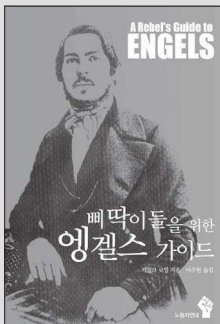
번역 이원웅

추천 책



처음 만나는 혁명가들 마르크스,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마이크 곤살레스, 이언 버철, 샐리 캠벨, 에스미 추나라, 크리스 뱀버리 지음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 352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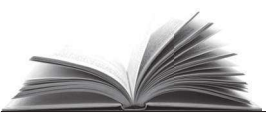
베딱이들을 위한 엥겔스 가이드

케밀라 로일 지음,
이수현 옮김
노동자연대 | 104쪽 | 4,000원



새 번역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 392쪽 | 15,000원



서평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마이클 셸러버거, 부키, 664쪽, 22000원), 《불편한 사실》(그레고리 라이트스톤, 어문학사, 251쪽, 18000원)

다시 고개드는 기후 변화 회의론

장호중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한 4월 말에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두 권의 책이 번역돼 나왔다. 두 책은 서울 시내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올랐다. 미국 정부조차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며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은 내놓은 상황에서 이는 다소 이례적인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 지배자들은 기후 위기 해결보다 기업주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그들의 대책은 기후 위기 해결에는 한참 못 미치는 반면,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등을 새로운 시장으로 키우는 데에 큰 열의를 보이고 있다(관련 기사 : ‘권력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노동자 연대〉 371호). 이를 위해 정부 기업을 민간 기업들에 넘겨주고, 재정 지원으로 기술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특히 빌 게이츠 등은 핵발전을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과 문재인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강조해 핵발전소 수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마이클 셸러버거, 부키, 664쪽, 22000원),은 국내에 ‘탄핵’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마이클 셸러버거가 2020년에 쓴 책을 번역한 것이다. 셸러버거는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탈핵’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국내 우파 언론들은 셸러버거를 ‘타입’지가 선정한 환경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며 핵발전이야말로 진정한 대안이라는 그의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은커녕 미국과 함께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하고 소형 핵발전소(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그의 책이 출판된 것은 문재인인의 개혁 배신으로 우파의 사기가 올라간 현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이다.

셸러버거는 기후 변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한다. 다만 기후 변화의 위험성이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종말은 오지 않는다’(Apocalypse Never)이다.

책의 1장 “세계는 멸망하지 않는다”에서 저자는 오늘날 기후 변화의 효과로 거론되는 현상들(산불, 해수면 상승, 식량 위기, 산불 등 자연재해)이 기후 변화와 별 관계가 없거나 과장돼 있다고 주장한다.

“1920년대에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40만 명이었던 반면 2010년대는 40만 명에 불과하다.”

자연재해가 대부분은 인재와 결합



2018년 인도네시아. 해수면 상승과 더 잦아진 폭우는 더 큰 재해로 이어질 것이다

돼 커다란 피해를 낳는다. 이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상하수도나 도로, 병원, 소방 체계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거의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이 년센스라고 여길 것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2020년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2000~2019년의 자연재해를 그전 20년과 비교한 결과, “2019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로 치솟으면서 폭염과 가뭄, 홍수, 혹한, 태풍, 산불 등 극한 기상 현상들이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하고 발표했다. 홍수는 2.3배, 태풍은 1.4배로 늘었다. 인명피해 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저소득 국가에 피해가 집중돼 재해 사망률이 사회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식량 생산량이 확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말은 전체 맥락에서 떼어낸 왜곡일 뿐이다. 셸러버거가 인용한 보고서는 서두에서 해당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 모든 도전들 중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FAO 2018)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산불과 기후 변화가 관계없다고 한 주장도 억지일 뿐이다. 해당 전문가는 산불의 원인을

기후 변화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을 뿐이다. 오히려 “1910년부터 1960년까지 기간을 살펴보면 화재 발생 건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건 강수량입니다. 하지만 1960년 이후로는 중심지표의 자리를 기온이 차지하게 되죠.”(68쪽)

셸러버거는 자신의 주장 곳곳에 주석을 달아 근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듯한데(깨알같은 글씨의 주석이 664쪽 중 78쪽이나 차지한다), 부정확할 뿐 아니라 아전인수 격이라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

셸러버거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 저절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 발전으로 기업들은 세일층과 바다에서 더 많은 천연가스를 채굴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이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13퍼센트 줄어들게 된 주요 원인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다.”(251쪽)

또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풍요를 이루고 나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은 줄어든 것이다. ... 기술의 힘으로 우리는 기후 변화를 막아 내고 있다.”(78~79쪽)

“세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201쪽)

그러나 먼저 이런 전망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 비중이 줄고는 있지만 석탄·석유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천연가스도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다. 천연가스가 석탄·석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면 탄소 배출량도 늘어난다. 미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에는 값싼 천연가스 공급이 한 요인이 됐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2007년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불황이 훨씬 큰 영향을 끼쳤다.(그림)

오늘날 중국과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이 ‘저절로’ 줄어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앉아서 재앙을 기다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3도’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3도 높았던 시기는 300만 년 전 플라이오세 시대이다. 이때 인류의 조상은 아직 아프리카에만 존재했다. 해수면 높이는 지금보다 25미터 높았고 양극에는 얼음이 없었다.(마크 라이너스, 《6도의 멸종》)

물론 인류가 멸종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고통이 특히 빈국과 선진국의 하층민들에게 닥쳐올 것임은 분명하다. 셸러버거는 뭐라고 할까?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문제는 이미 어딘가에서 발생해 온 문제들이다. 인간 사회는 그런 문제를 겪고, 회복했으며, 적응해 나갔다.”(60쪽)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집단면역’을 갖추자며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 위험에 방치한 일부 지배자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천연자원보호협회, 환경보호기금, 시에라클럽

셸러버거는 일부 환경운동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꼬집으며 물타기를 시도한다.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정작 화석연료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셸러버거가 주로 예를 드는 천연자원보호협회, 환경보호기금, 시에라클럽 등은 오늘날 기후 변화 운동 등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부르주아 환경(자연)보호론자들의 관심사(자신들이 등산이나 스포츠를 즐길 산이 파괴되는 것에 반대하는)에서 출발한 단체로 진보적 성격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런 단체들이 “자연 보호를 내세워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정책을 촉구하고 추진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기후 위기 반대 운동의 대의를 깎아내리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적지 않은 환경 엔지오 단체들이 문제 의식 없이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는 관행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런 일은 해당 단체의 입장과 실천에 악영향을 주며, 운동의 대의를 훼손하려 하는 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그러나 셸러버거에게는 이 점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그가 창립한 ‘브레이크스루연구소’의 주요 후원자들 중에는 ‘신시아와 조지 미첼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은 천연가스 시추와 프래킹으로 번 돈으로 세운 재단이고 천연가스 시추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마이클 만, 《누가 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가》)

셸러버거는 유명 스타들이 기후 변화에 목소리 내는 것도 위선이라고 지적한다. 셸러버거는 그들에게 진지한 행동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닥치고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좌파적 비판과는 정반대다.

핵무기 찬양

셸러버거는 환경 운동가들이 핵발전소와 핵무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둘 다 반대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핵발전과 핵무기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핵발전소에서는 궁극적으로 핵무기 원료가 생산된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만들어 세계 곳곳의 핵발전소를 감시하는 이유다.

또 핵연료를 다루는 기술(과 각종 제도·시설·인력 등)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 필수적이므로 핵발전을 도입·유지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준비하는 셈이다.

예컨대 최근 빌 게이츠가 띄우고 문재인 정부도 개발에 열을 올리는 소형 모듈반응로(SMR)는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의 엔진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핵잠수함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셸러버거 자신이 핵무기 찬양으로 기울어 일구어언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핵무기는 전쟁을 막고 끝내기 위해 개발되었다. ...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시도는 재앙에 가까운 쓸데없는 갈등으로 치달곤 했다. ... 핵무기의 존재를 직시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멸망할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547쪽)

핵무기의 위력이 핵보유국들 사이에 정면 충돌을 머뭇거리게 하긴 한다. 그러나 과거 전쟁들에서도 지배자들은 자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을 알고도 전쟁을 벌였다. 자국의 세계적

용어설명

프래킹

수압파쇄법 고압의 액체를 이용해 광석을 파쇄해 천연가스, 석유 등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지하수 오염과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기후 위기 부정론자들은 기후 위기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주장 모두 근거가 없다

지위와 자국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말이다. 오늘날 팬데믹과 기후 위기의 위험을 직시하면서도 그 해결책을 미루는 자본가들이 ‘인류를 위한다는 착각’이야말로 위험한 것이 아닐까?

채식, 인구, 탈성장

교활하게도 쉘런버거는 일부 근본 생태주의자들과 환경운동 지도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기후와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 전체를 폄하하려 한다. 예컨대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과장해 채식을 강요한다. 인구 증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거나 경제 성장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셸런버거는 몇 가지 사실을 들어 이런 주장을 비판하고 선진국의 환경 운동가들이 개발도상국과 빈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오미 오레스케스는 유명한 책 《의혹을 팝니다》에서 이처럼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일부 ‘과학자’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부정하고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데에서 이런 수법을 즐겨 사용해 왔다.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경로다. 특히 거대 농축산 기업들은 농장을 건설하려고 산림을 파괴하고 가축을 가혹한 환경에 내몰아 이윤을 늘려 왔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도 늘었다. 그러나 이런 환경 파괴가 인구와 생산량 확대의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세계식량농업기구의 발표만 보더라도 농업과 기술 개선으로 농업의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대안은 세계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윤 논리 탓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구 증가 때문에 기후와 환경이 파괴됐다는 주장은 사실도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와 이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든 문제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논리일 뿐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뮐서스의 주장을 비

판하는 데 그토록 공을 들인 이유다.

“인구 과잉은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관계이지, 추상적 숫자나 필수품 생산력의 절대적 한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한계는 구체적인 생산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아테네인들에게 인구 과잉을 의미했을 숫자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작게 보이는가!” (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그러므로 ‘탈성장’론도 약점은 있다. 자본주의적 성장 외에 대안이 없다는 관점이 핵심 문제다. 풍요로운 사회를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사실 쉘런버거도 이런 관점을 공유한다. 다만 그의 결론이 정반대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이 환경 파괴를 낳는 것은 생산이 인류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즉, 생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한다면 인류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풍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들의 생산이 늘면서도 낭비와 파괴적 생산은 줄어들 것이다.

기후 변화 문제로 보자면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대규모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철도를 중심으로 한 화물 운송 체

계, 단열이 잘 된 빌딩 건설 등도 그런 대안들 중 일부다. 반면, 군대나 비트코인처럼 자원을 낭비하고 파괴적인 부문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이런 대규모 변화를 주어진 시간 내에 이루려면 기존 화석연료 체계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들을 물러서게 할 힘이 필요하다. 마르크스는 이윤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노동계급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 이윤 창출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채식주의나 인구과잉론, 탈성장론을 둘러싼 운동 내 논쟁은 피할 수 없다. 소외된 노동으로 신체·정신 모두 에너지가 고갈되는 노동자들은 채식주의의 삶을 선택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채식주의는 노동자 개인들에게 환경 파괴의 책임을 떠넘기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노동자들이 서로를 탓하고 불신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 단결이 어려울수록 운동의 힘은 약해지고 문제 해결에서 멀어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기후 운동 내에는 이런 문제적 관점들이 강력하다. 그러다보니 오늘날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접해 보지 못한 청년과 노동자들은 생태주의적 탈성장론과 자본주의적 성장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잘못된 압력을 느끼기 쉽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노동계급과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전자의 주장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쉘런버거가 운동을 비난하며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저에너지 농경 사회로 돌아가자는 퇴행적 움직임으로 지금까지 이룩한 발전을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538쪽)

개혁주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무능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노동조합과 개혁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은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기층 노동자들이 기후 운동의 일부가 되도록 진지하게 조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기후 집회의 연단에 올라 한마디 거들거나, 운동에 대한 재정적 후원 정도를 ‘노동’의 구실로 제한해 왔다.

강력한 대중투쟁이 없다면 통과되지 못하거나 통과돼도 실행되지 못할 법안을 발의하고는 운동 건설은 뒷전인 것도 문제다.

이들은 생태주의자들과 달리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 해결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이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해결책에 가깝다.) 그러다보니 어설픈 절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노동자들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끌어지기 쉽다. 지금 같은 불황 시기에 자본주의적 성장, 즉 기업주들의 이윤을 늘리려면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도 되는 양 주장하기도 한다. 도덕주의적 호소의 폐해이기도 하다.

얼마 전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활동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의 임금을 온전히 보전해 주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정규직만 계속 많이 받는 상황이 될 텐데 이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주장했다. ‘기존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지금의 임금이 문제라고 말하

는 셈이다.

그나마 지난 10년 사이에 좌파 개혁주의의 연이은 실패는 왼쪽 대안이 사라진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리스의 시리자, 미국의 버니 샌더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에 이르기까지 급진적 사회 개혁(그린 뉴딜, 국유화 등)을 통한 기후 위기 해결을 제시해 온 좌파 개혁주의 세력은 불과 몇 년 만에 주변적 지위로 밀려나 버렸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근본에서 이들의 실패는 자본주의 국가를 활용한 개혁이라는 전략의 실패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은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에게 이중의 과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에 맡겨두지 말고 직접 기층 노동자들을 운동의 일부로 조직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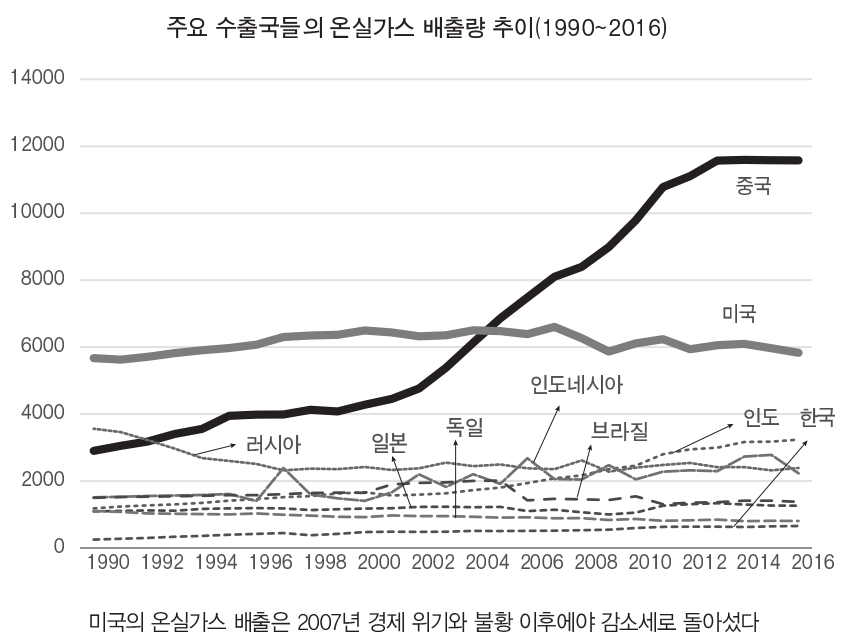
좌파가 늙어 빠진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꿈꾸니만 쫓는 것은 쉘런버거 같은 자들이 목청을 키우고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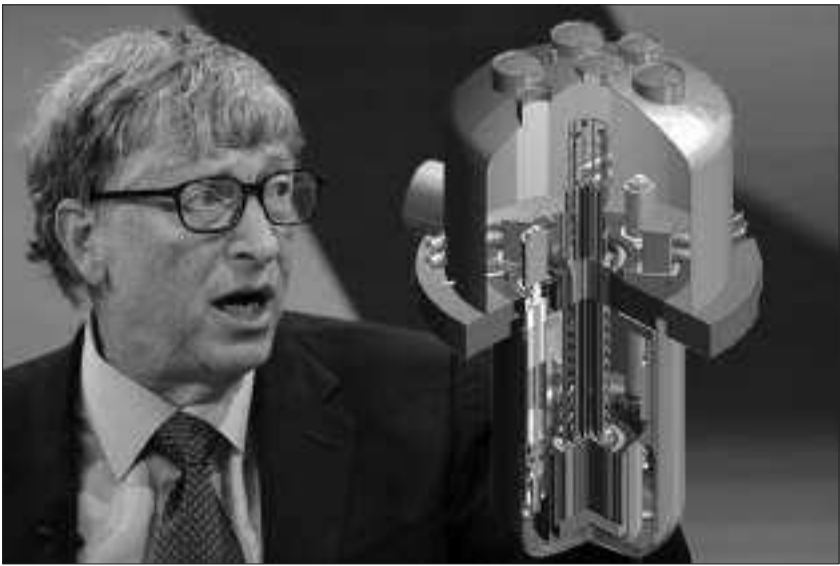
한편, 쉘런버거의 책을 번역한 노정태는 진보신당의 청년 당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경향신문〉 칼럼을 쓰다가, 지금은 《신동아》와 〈조선일보〉에 자주 기고하는 우파의 아이돌이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울었는데, 이후 빠르게 우경화했다.

역자 후기에서 노정태는 쉘런버거와의 만남을 돌아보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쉘런버거가 노정태의 야망을 매우 빨리 간파한 듯하다.

“그(셸런버거)는 내(노정태) 경험을 ‘영웅의 경로’로 그려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 이 책은 내 인생의 책 중 하나다. 앞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심지어 출간되기 전부터 내게는 그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571~573쪽)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은 오늘날 중도 정치세력의 개혁 대신에 실망한 청년들에게 우파적 진로를 제시하는 책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





빌 게이츠 등의 핵발전 대안론은 기후 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더 큰 위험을 낳는다

트 저널》등 기업주들의 언론이 이 책을 추천하고 아마존, 반스앤드노블 등 대형 서점들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국내에서도 문제인의 탈핵·탈석탄 공약 폐기는 찬핵론자와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후 위기를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계기로 삼으려는 자본가들은 일종의 양동 작전을 펴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기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하면서도 예리한 논쟁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책인 《불편한 사실》(그레고리 라이트스톤, 어문학사, 251쪽, 18000원)은 미국 이산화탄소 연맹의 회장이자 악명높은 하트랜드연구소 자문위원인 그레고리 라이트스톤이 2020년에 쓴 책이다. 하트랜드연구소는 담배 기업들의 돈을 받으며 담배의 유해성을 부정하는 ‘연구’들을 발표하고 화석 연료 기업들의 돈을 받아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프레드 싱어가

있다.

책을 번역한 박석순 교수는 이화여대 환경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따라서 쉐런 버거의 책에 비해서는 순도 높은 거짓말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덜 헛갈린다.

그레고리 라이트스톤이 펴는 주장들은 비교적 잘 알려진 것들로 일부는 쉐런 버거의 책에서도 거론된다. 예컨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이 잘 자라고 그래서 다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 등이 있다. 주요 주장들과 진실은 아래 정리했다.

《기후 위기, 과학이 말하다》(존 룩, 청송재, 19000원)와 《누가 왜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가》(마이클 만, 톰 벨스, 미래인, 13000원)은 이런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

진실, 혹은 거짓?

- ▲ 지구온난화는 1998년에 멈췄다 : 1998년은 유난히 엘니뇨가 심한 해였다. 즉 매우 더운 해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2010년까지 추이를 그려 보면 정말로 멈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2014~2020년까지 7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들로 기록돼 이런 주장은 파탄났다.
- ▲ 남극 얼음은 두꺼워지고 있다 : 일부 지역은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기후 변화는 지구 전체에 똑같은 효과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남극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
- ▲ 온실가스보다 태양과 공전궤도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준다 : 온실 효과는 낮보다 밤이, 여름보다 겨울이 온도 상승폭이 크다. 태양의 변화는 반대다. 현재 태양 활동이 약화되는데도 지구 기온은 오르고 있고, 밤과 겨울의 온도 상승폭이 큰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 ▲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미량의 원소일 뿐이다 : 미량의 원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약이나 독을 생각해 보라.
- ▲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수증기다 : 맞다. 그러나 수증기의 양은 대기의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늘어 대기가 따뜻해지면 수증기도 늘어 기온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낸다.
- ▲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식량 생산이 증가한다 : 그런 효과는 있다. 그러나 식량 생산은 이산화탄소 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뭄이나 홍수가 잦아지면 흉작이 될 수 있다.
- ▲ 미국 자연과학자 3만 1000명이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 가설을 반대한다 : 그런 청원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3만 1000명은 미국에서 자연과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의 0.3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서명자 중 기후 과학자는 전체의 0.1퍼센트밖에 안 된다. 반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논문의 97퍼센트는 인간이 기후 변화를 초래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 ▲ 중세에도 온난기가 있었다 : 일부 지역의 기온이 높긴 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화산 폭발이 잦아든 효과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효과가 없고, 중세 때 전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낮았다.
- ▲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꾸며낸 편지들을 주고받았다(기후게이트) : 두 나라에서 아홉 건의 독립된 수사가 있었지만 거짓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메일을 폭로한 사람들이 일부 표현과 문장을 맥락에서 떼어내 왜곡했을 뿐이다.

미국 성소수자 권리 악화되는데도 주한 미대사관은 무지개 깃발?

성지현

올해에도 ‘성소수자 자금심 달’인 6월, 주한 미국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광화문 대사관 건물에 걸었다. 미대사관은 2017년부터 6월이 되면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올해에는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성명까지 내고 각국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게시를 적극 고무했다.

미대사관의 이런 행위가 뻗속까지 친미인 개신교 우파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6월 14일 개신교 우파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지개 깃발 게시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경솔한 행동”이라며 규탄했다.

하지만 성소수자 혐오적 우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대사관 무지개 깃발을 환영할 이유는 없다. 미대사관의 무지개 깃발은 미국 지배자들이 자국과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악행을 가리기 위해 이용하는 ‘핑크워싱’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미대사관은 이런 목적으로 2014~2019년 퀴어문화축제에도 참가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직접 참가해 〈한겨레〉등 자유주의 언론들의 우호적인 주목을 받았다. 몇 달 뒤 그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5배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했다. 2017년에는 특별히 대구 퀴어 퍼레이드에도 미대사관이 참가했는데, 당시 대구 옆 성주에서는 미국이 요구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항의가 한창이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연장선인) 미대사관은 한국에서 제국주의적 긴장과 갈등을 키우면서,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성소수자 쟁점을 이미지 세탁용으로 이용해 왔다.

특히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국 내 성소수자의 처지를 보면, 미국 정부의 위선이 더 잘 드러난다. 지난해 미국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성소수자들은 더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다. 또 우파들의 공격도 극심해져, 미국 최대 성소수자 단체는 올해가 “성소수자에 대한 주 입법 공격이 미국 역사상 최악인 해”라고 선언할 정도다. 미국 전국

곳곳에서 십대 트랜스젠더들이 우파들에게 집중 공격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크게 일어났을 때 ‘흑인 트랜스 목숨도 소중하다’ 구호도 함께 외쳐졌다.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44명이 살해당할 만큼 끔찍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중 약 80퍼센트가 유색인종이었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미대사관의 무지개 게시를 “기만”이라며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등 경쟁국을 견제하며 동맹을 결집시키는 데서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 지배계급의 인권 운운은 늘 위선이었다. 성소수자 인권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뿐이다. 예컨대 바이든이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는 합의한 동성간 성관계조차 불법인 나라이다. 심지어 최고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한다. 반면, 중동에서 미국이 견제 대상으로 여기는 이란의 성소수자 인권은 비단 명분으로 이용해 왔다.

바이든은 미국에서 성소수자 권리가 놀랍게 진전됐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성소수자 차별 완화는 미국 국가의 선의로 주어진 선물이 아니다. ‘성소수자 자금심 달’의 기원이 된 스톤월 항쟁 자체가 차별적인 미국 국가와 경찰에 맞선 아래로부터 대중 반란이었다. 당시 급진적인 반란 물결 속에서 성소수자들도 기존 사회 질서의 전복, 혁명을 얘기하며 전투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그 덕분에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에서 반동성애법이 폐지됐고, 수십 개의 도시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미국 국가와 미대사관은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니라, 미국 내 차별 받는 사람들과 세계의 대중이 함께 맞서 싸워야 할 적이다.



주한 미대사관에 걸린 무지개 깃발 미국은 자국 내 성소수자 차별을 즐기고 있다?

캐나다는 과연 성소수자 친화적 국가인가?

주한 캐나다 대사관도 SNS에 ‘성소수자 자금심 달’을 기리며 올해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참가를 알렸다. 캐나다 대사관은 자신을 “전세계 성소수자 권리의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지지자”라고 소개했다.

캐나다는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첫 번째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다. 북미 최대 규모인 토론토 자금심 행진에는 캐나다 총리도 참가한다.

하지만 캐나다 성소수자의 권리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캐나다에서는 1969년 전까지 동성애가 불법이었다. 그러나 1969년

후에도 성소수자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 1981년 캐나다 경찰은 게이 사우나 4곳을 급습해 성소수자 300여 명을 체포했다. 이는 사회적 격분을 일으켰고, 수천 명이 항의하며 행진을 벌였다. 이 사건은 캐나다의 ‘스톤월 항쟁’에 비유된다. 토론토의 자금심 행진은 여기서 비롯됐다.

2010~2017년에 토론토의 성소수자 공동체의 중심지로 알려진 처치와 웰슬리 지역에서 유색인종 남성 동성애자 7명이 사라졌다. 이것은 동성애자를 타깃으로 한 연쇄 살인임이 밝혀졌는데, 토론토 경찰은

동성애 혐오 때문에 시신이 나올 때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거부했다.

최근 토론토시는 자금심 행진이 ‘이스라엘 아파트헤이트 반대 퀴어’라는 단체의 참가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자금심 행진의 기금을 없애려고 했다. 이는 대규모 항의로 실패했다.

오늘날까지 캐나다에서는 공공 기금을 받는 대부분의 가톨릭 학교에서 성소수자 지지 동아리가 금지되고 있다.

주요 도시 밖에서는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단체들이 별로 없어서 성소수자 처지가 훨씬 더 열악하다.



사진 출처: Photothèque Rouge.

6월 12일 프랑스 전역에서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다

프랑스

파시즘과 인종차별 위협에 맞서 시위가 벌어지다

찰리 킴버

6월 12일 프랑스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과 극우, 정부의 시민적 자유 공격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은 140곳에서 총 1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파리에서는 7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무부는 전체 참가자가 3만 7000명이며 파리에서는 9000명밖에 안 됐다고 주장한다.

중대한 국면을 맞아 모든 주요 노조 연맹과 좌파 정당들이 이 시위를 호소했다. 여러 인종차별 반대 단체, 환경단체, 성소수자 단체들도 함께했다.

파시스트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에마뉼엘 마크롱 정부가 더욱 우경화하면서 프랑스의 인종차별주의 자들과 파시스트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다.

반대

교사인 마르틴은 〈소셜리스트 위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리 거리에서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내서 좋았어요. 평소에는 두려워서 못하던 일이지.

“노동조합원과 정치 단체들이 꽤 많이 참가했지만, 시위가 더 커져야 해요. 일회성 행사로 끝나선 안 돼요.”

시위대는 다음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행진을 시작했다. “우리는 몇 달 간

우려스러운 정치적·사회적 기류를 목격해왔다.

“극우와 손을 잡거나 극우적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는 급단의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인종차별적·성차별적 언행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자유를 말살하는 여러 법이 감시와 통제가 지배하는 권위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어떤 법은 종교를 이유로 사회구성원 일부를 낙인찍고, 다른 법은 전투적 행동을 공격 표적으로 삼는다.”

내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르펜과 마크롱이 접점을 벌이는 중인데, 둘 다 25~30퍼센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마크롱은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공격하며 오만하게 행동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워 코로나19에 대응한 탓에 인기를 크게 잃었다.

하지만 좌파는 이러한 정서를 대체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르펜의 국민연합이 이러한 정서에서 많은 득을 보고 진정한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

정부의 무지막지한 대응은 파시스트들에게 적응하는 것이다. 정부는 악랄한 이슬람 혐오와 시위 금지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슬람혐오반대연합(CCIF) 같은 무슬림 권리 단체를 해산시켰고, 무슬림을 겨냥한 반(反)분리주의 법을

강행했으며, 경찰력을 강화하려 하고, 르펜의 인종차별주의를 묵인해 왔다.

이 법안들은 어찌나 가혹했든지, 지난주에는 최고 권력층의 기구인 국참사원[프랑스의 최고 행정재판소이자 정부의 자문 기관]마저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 정도였다. 국참사원은 경찰에게 “토끼몰이”를 허용하고 기자의 보도권을 제한하는 조처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참사원은 그러한 권한들을 더 명확하게 기술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정부의 행보는 르펜의 호소력을 약화시키기는커녕 그가 옳았던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면 르펜은 더 가혹한 조처를 요구한다.

르펜, 국가의 인종차별, 자유를 공격하는 법안들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옳다.

마크롱은 절대로 파시즘을 막는 방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합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하며 특별히 르펜을 겨냥하는 운동도 필요하다.

내년에 국민연합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국민연합은 마크롱보다 더 나아갈 것이다. 국민연합은 무슬림, 이주민, 흑인, 좌파를 공격하는 극우 거리 운동을 부추길 수 있다.

반파시즘 공동전선이 시급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위커〉 2759호 / 번역 김동욱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록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름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workerssolidarity.org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 2021년 2월 27일 개정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히 드러낸다.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이진우

메리 다니엘 씨(사진, 52세)와 그녀의 딸 유스티나(21세)는 2016년 이집트의 정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 당시 임신 중이던 메리 다니엘은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벌써 6살이 됐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작가이자 독립 언론인으로 책과 칼럼을 쓰면서 무바라크 독재를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

그녀의 남동생이자 유스티나의 삼촌인 미나 다니엘은 이집트 혁명 당시 카이로 도심 시위 도중 군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는 이집트 독재에 반대하는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것을 호소했었다. 사망한 날이 체 게바라 사망일과 같아서 많은 이집트인들이 그를 '이집트의 체 게바라'로 불렀다고 한다.

2019년 메리 다니엘 가족은 임금체불, 학교에서의 괴롭힘, 인종차별적 언행들에 큰 상처를 받고 독일로 떠나려 했다. 그러나 독일 메르켈 정부의 국경 통제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해 관련 기사 본지 282호 '한국 못 건너 떠나려는 이집트 난민들' 한국에 남아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메리 다니엘은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유스티나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스티나 엄마랑 동생은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 난민 신청자입니다. 체류 연장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나만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어요. 매달 9만 5000원씩 내는 건강보험료, 체류 연장 때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내는 수수료도 부담이에요. 너무 비싸요.

난민으로 인정받았어도 힘든 점이 있나요?

메리 다니엘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딸을 대학에 보내고 싶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며 살고 있는데 월세가 올라서 또 이사를 가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적 문

제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제 아들은 이집트인도 아니지만 한국인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나 계속 한국에 살고 있는데도 국적이 없는 것이죠. 그럴 거면 난민 인정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2019년] 독일 입국을 거부당해 3일을 공항에서 생활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난민들이 공항에서 노숙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한국 정부가 난민들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메리 다니엘 아이가 어려서 그동안 외출이 힘들었던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웃과 교류도 없어요. 영어도 유창하지 못해요. 일단 언어 문제가 가장 힘들습니다.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당신박에는요. 한국어도 많이 어려워요. 일도 하고 싶지만 일단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예전에 제가 하던 일을 여기서 하기도 어렵고요.

유스티나 한국어를 못해서 파들림당했던 예전 학교[경주]에서의 기억 때문에 저는 서울 생활이 더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친구가 없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거나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또 다른 친구들과 페이스북에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게 고작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커요. 일단 검정고시에 붙어야 하는데 국어, 수학, 한국사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주말 이틀 동안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해요. 그런데 이전 일하는 곳에서 임금체불을 당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무튼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대학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아랍어 통역사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인터뷰·정리 김어진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이집트 출신 난민 압델라흐만 아테프 씨(사진)는 이집트 정권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 이집트에서 그는 변호사이자 인권 활동가로 일했다. 아테프 씨는 난민 심사에서 한 차례 떨어졌다가 최근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해 2019년 법무부 앞에서 동료 이집트 난민들과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그는 자동차 배터리 커버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가 일하는 공장에는 난민과 이주노동자가 대거 고용돼 있다고 한다.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 자리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다.

정부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취업 제한 등으로 난민들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 그런데 최소한의 생계지원금도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난민들이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출국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류와 노동조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진우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나요? 노동조건은 어떤가요?

김천의 자동차 배터리 커버 만드는 공장에서 제품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위험합니다. 감전되는 일도 있고,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2주 전에도 산재가 발생했어요. 노동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기본적으로는 8시간인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굉장히 고됩니다.

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사람마다 노동강도가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 출신국별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중국동포 노동자가 업무를 바뀔 달라고 요구하면 들어 주는데, 난민 신청자들은 불안정한 처지라 그런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G-1 비자 소지재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사업장을 바꾸기 어려워요. 바뀌어도 비슷하거나 더 나쁜 곳이에요. 뭘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니 좋은 곳

을 골라 갈 수 없죠. 난민 인정을 받으면 그나마 옮길 수 있는데, G-1 비자는 그런 자유조차 없고 제약이 가장 많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2~3개월,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1년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걸림돌이다. 사용자들이 안정적인 체류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들의 취업을 '비전문' 업종으로 제한한다.]

동료의 산재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손이 기계에 끼여 신경이 끊어지는 사고였어요. 수술하고 집에서 15일 동안 일을 못 나갔습니다. 일을 못 하니깐 월급을 못 받고 치료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회사는 나 몰라라했습니다.

사측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월급으로 주겠다며 무마하려 했어요.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내 권리니까 절차대로 처리하자고 요구했어요. 그러자 사측은 내쫓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은 난민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어요. 우리는 입국할 때나, 비자 갱신할 때 적지 않은 수수료를 내고 한국 국민처럼 세금도 다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우하고, 사고 났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좋아진 점이 있나요?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한국을 떠나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난민 인정을 받았으니 안정감은 들어요.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자유도 생겼어요.

다만,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직장도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하고, 가능하다면 대학도 새로 가고 싶어요. 현재 30살인데 50살 될 때까지 지금 일하는 공장에서 부상이나 재해 위험에 노출되며 계속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난민이 아니라 인종차별을 막아야 한다

사진: 조수경

더 나은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 이전까지 살아 왔던 삶은 끝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여행도 다니며 밝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와 압박이 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요?

얼마 전 한국 정부(와 지자체들)는 외국인들, 난민 신청자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주노동자 전수검사를 했어요. 인권위에서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통계만 봐도 내국인한테서 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집트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무슬림형제단 때문이라며 희생양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술집이나 클럽도 다 열려 있고 수백 명이 이용하는데 왜 우리한테 차별적인 조치를 하나요?

문재인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연 정책입니다. 난민

심사 과정을 엄청 길게 늘어뜨리면서 사람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적지 않은 난민들이 법무부의 1차 심사에서 거절당한 후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말이 안 돼요.

앞으로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저와 같은 난민이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싶어요. 이집트에서 변호사이자 인권 활동가였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직장도 구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습니다.

인터뷰·정리 임준형·김어진 / 통역 박이랑

추천 소책자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김어진 외 지음, 노동자연대, 90쪽, 4,000원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김어진

코로나 이후 난민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빠졌다. 2020년 12월 기준 유엔난민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다. 시리아(660만), 베네수엘라(370만), 아프가니스탄(270만), 남수단(230만), 미얀마(100만) 순이다. 전쟁과 기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 중 3000만~3400만 명이 아동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난민 발생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의 제거/유지에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강대국들(미국, 러시아, 프랑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경쟁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면서 악화일로로 걸었다.

그러나 난민 발생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국가들은 난민 수용을 사실상 거부한다. 그 결과 난민 최대 수용국들은 터키(360만), 콜롬비아(180만), 파키스탄(140만), 우간다(140만) 등이다.

각국 지배자들은 수용 여력 부족을 운운한다. ‘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대’(프론텍스 Frontex)의 예산은 2020~2027년 사이 120억 유로가 늘어난다. 이 액수는 유럽연합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쓴 이민통합기금 약 31억 유로의 네 배에 이른다.

프론텍스는 폭력적인 난민 저지 작전인 ‘푸시백’ 작전을 벌인다. 난민들을 태운 고무보트나 나룻배, 뗏목 등을 터키 영해 쪽으로 밀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무수한 난민들이 목숨을 잃는다. 그래서 저명한 기아 문제 연구자인 장 지글리는 프론텍스가 난민을 저지하는 폭력 집단이라고 일컬었다.

유럽 경찰들은 난민 색출에 인공위성과 무인기 감시 데이터, 각종 최신 드론을 동원한다. 난민들이 망명 신청서조차 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첨단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공항에서 난민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인천공항에서 287일 동안 노숙한 난민 루틴도 가족이 그런 사례다. 얼마 전에는 한 난민이 인천공항에 무려 423일 동안 억류돼 있다가 인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겨우 입국하기도 했다.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지배자들은 국내 안전 운운한다. 그러나 난민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뉴스 대다수는 가짜 뉴스다. 2016년 한 난민을 베를린 트럭 테러범으로 몬 보도나 스웨덴 난민의 ‘성폭력 범죄’도 모두 가짜 뉴스였다.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거짓 정보가 뉴스와 인터넷을 잠식하고 있다.”(국가인권위, 카드뉴스 ‘가짜 뉴스가 난민을 죽입니다’, 2019)

난민들이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난민 신청자가 받는 생계지원금은 취업이 금지된 초기 6개월 동안만 지급될 뿐이고, 1인당 21만~43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지급액은 2018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이조차 법이 그렇다는 것일 뿐, 실제로는 2019년 기준 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2.5퍼센트만이 평균 3.2개월 동안 지원받았다.(난민인권센터,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처우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난민 신청자는 의료보험 지역가입도 불가능하다.

난민은 마치 일자리와 경제를 위협하는 존

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경제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자본주의의 경기 변동이다. 오히려 유럽연합의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의 난민 유입으로 유럽연합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0.1~0.2퍼센트 증가했다. 난민 유입이 가장 많았던 독일의 경우 단기적 성장률 증가 효과가 0.4~0.8퍼센트에 이르렀다는 추산도 있다.(박복영, ‘난민이 해외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8).

왜 연대해야 하는가

한국에서도 난민들은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는다. 내국인들이 가장 꺼리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난민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배자들은 난민을 배척하거나 난민을 터부시하는 생각을 조장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 난민 이주민에 대한 경계심 조장은 ‘분열해서 지배’하는 정치적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만들어 내고, 이를 난민·이주민에 대한 차별로 뒤틀어 내면화시키려 한다. 그럼으로써 대중이 겪는 고통의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 계급의식과 연대정신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인들도 난민의 고통을 겪은 역사가 있다. 예컨대 4·3 제주 항쟁 때 많은 제주도민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했고 다시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했다. 추방을 모면하면 타국 땅에서 멸시와 차별에 시달리기도 했다. 물론, 그후 한국은 난민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난민이 들어오는 국가가 됐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난민을 배척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그 ‘과거’를 이를 테세다.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에 해악적이다.

난민을 거부하는 거짓말들을 폭로하고 난민에 연대하는 일은 노동계급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서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난민·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했다. 한국이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낳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 증대 속에서 난민·이주민을 속죄양 삼는 일도 찾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한다면 사회 분위기가 우경화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일은 가능하다. 1980년대 유럽 전역에서 우익이 난민에 대한 적개심을 퍼뜨리기 시작했을 때 인종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벌어졌다. 네덜란드에서 20만 명이 참가한 서명 운동이 추방 위협을 받고 있던 난민들을 구했고 영국에서는 수천 명이 난민 학생들의 추방을 막는 캠페인을 조직했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난민에 연대하는 지역 네트워크들이 생겼다.

난민과 이웃으로 살아가고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경험은 다른 여러 편견을 녹이는 데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난민에 대한 연대는 난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이 될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뿜어내는 차별과 천대를 끝장내는 투쟁을 구축하는 장기적 과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소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양효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중단
을 내걸고 6월 14일부터 단식에 돌입
했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이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노조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
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고객센터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중단(21일부터 업무
에 복귀)하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대화 테이블에 참가할 길이
열렸지만 사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공단 측이 직접고용 논의 테이블을 거
부하며, 고객센터가 직영화 대상인지
부터 심의하겠다고 개최한 회의다. 즉,
직영화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 목적이 큰 것이다. 게다가 협의회는
공단 측 2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
져 있는데, 노조들은 청문 자격으로만
참가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노조의 의
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도 힘든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무논의협의회 참
가를 확정받은 것만으로 파업을 종료
해서는 안 된다는 기층 조합원들의 반
발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김용익은 대화조차 거부하는 모양
새를 피하면서도, 직접고용 책임을 회
피할 방도를 만들어 냈다. 상담원의 직
접고용을 반대하는 정규직 노조 지도
부의 참가를 전제해야만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말이다. 사실 김용익
의 단식 소동 자체가 상담원 직접고용
에 대한 공단 책임을 회피하고, 직접고
용 여부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 갈등'이 상황의 본질인 것처럼 호
도하려는 것이었다.

공단이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최근 한 공단 관계자는 사무논
의협의회에서 "지금의 민간위탁 방식
으로 갈 거냐 자회사로 할 거냐 등 적
정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
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그러나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공기
업들의 열악한 실태가 계속 폭로돼 왔
다. 자회사는 미흡한 고용 안정, 저임
금으로 '덤치만 큰 용역회사'로 불려 왔
다. 6월 14일 고객센터 노조는 "무늬
만 정규직인 자회사, 계열사 배제하고
직영화로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가 드러난 지금 자회사는 무늬도 정규
직이 아니다.

요컨대, 공단 측은 지금껏 그래 왔듯
이 어떻게든 직접고용 책임을 피하려
고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핑계 삼고,
자회사 등 꼼수 방안을 압박하려 들 공
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업을 중
단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
철될 수 있도록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
고 연대를 확대해 사측을 압박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진짜 사장"

단식에 돌입하면서 김용익은 "건보
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김용익의 태도는 여전하다. 투쟁을 지속해 공단 측을 계속 압박해야 하는 이유다. 6월 10일 원주 건보공단 본사 앞 파업 집회



김용익은 단식으로 '노노 갈등'이 상황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을 하게 됐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공
단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게 문
제의 원인이다.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들이 지적하듯
이 김용익 이사장이 "진짜 사장"이다.
상담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필
수 업무를 하고, 공단 사원번호까지 받
아서 일한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질병관리본부 업
무, 백신 접종 안내까지 도맡아 하며 전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원들은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한낱 외주 민간업체들 손에 맡
겨져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옮겨 지
적한다. 사실 외주 민간업체는 공단의
지시 없이는 작업장에 칸막이 하나 설
치 못 하는 '바지 사장'들일 뿐이다. 공
단 측은 그저 책임 회피와 비용 절감을
위해 이 불합리한 간접고용 구조를 유
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상담원들처럼 간접
고용 처지였던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다. 나머지 4대보험 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도 모두 직접 고용
됐다.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들의 직접

고용 요구만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익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파
로 불렸다. 그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
회와 창립 멤버이자, 참여연대 중앙집
행위원 등을 거친 보건 의료 엔지오 출
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대중 · 노무
현 · 문재인까지 역대 민주당 정부 내내
공직을 맡아 관료로서 보건 의료 정책
을 주도한 이력도 있다. 지금 다른 공기
업 사장들처럼 비정규직에게 냉담하고
비겁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심하기도
하지만, 놀랍지는 않은 이유다.

3월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김
용익은 "국가가 적극적 고용자로서 역
할"을 해 복지와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
다고 했었다. 정작 자신이 결정권을 쥔
건강보험 상담원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만 해 왔다.
김용익에게 국가의 고용자 역할이 양
질의 일자리를 가리킨 건 아닌 것이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각종 보
수언론과 경제지는 김용익의 단식을
1면에서 다루며 부각했다. 이들은 "정
규직화 밀어붙이기"가 이런 사단을 낳
았다며 과도한 정규직화가 문제라고
비난한다.

사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공단 측에게 있지만, 그
것이 과도한 정규직화 때문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매우 미온적이
고 부족한 목표와 방식에 있다. 특히 정
부는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늘리지 않아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조
장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대상도 선별했고 민간위탁
(3단계)은 아예 전환을 포기했다.

이런 방향 속에서 건강보험공단 측

도 더 손쉽게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
고, 그간 처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
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더 열악한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탓하게 이간
질했다.

김용익은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모두 한발씩 물러나 대화에 나서
라고 하지만, 상담원 노동자들이 수개
월 동안 대화를 요구할 때 거부해 온
건 김용익 자신이었다. 이런 태도에 분
노하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서
자 이제 와서 대화하려면 파업을 중단
하라고 나왔던 것이다. 이는 철저한 기
만이었다. 김용익의 진짜 목표는 상담
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중단시키고 요
구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김용익은 한술 더 떠 고객센터 노조
의 파업과 로비 농성으로 "공단 직원들
이 매우 격앙된 상태"라고 했다. 정규직
노조의 편협함과 분열적 태도가 비정규
직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이라는 것이
다.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 회피에 대
한 노동자 투쟁을 노조 간 갈등 프레임
으로 비튼 것이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
가 공단측의 정치적 구사대와 다름없는
구실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수작이
다. 추잡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하향 압박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의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고객센터 노
조의 파업 기간에 자기 조합원들이 대
체인력으로 동원되는 것도 방치했다
(상담원들이 지난 2월 파업할 때도 그
랬다). 사실상 노조가 사용자를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

자들을 내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
에게도 이롭지 않다. 비정규직의 열악
한 조건은 정규직 노동자의 조건 개선
에도 하향 압력이 되기 쉽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임금 인상을 억
제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한 후, 정규직
호봉제도 손보려 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사용자들은 비정규
직과 정규직 모두의 조건을 공격해 왔
다. 예컨대, 외주화가 확대되며 비정규
직이 열악한 처지에 내몰릴 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임금피크제나 성과연
봉제 도입 시도가 계속돼 왔다.

노동자들 사이에 이간질이 잘 먹힐
수록 이런 공격이 더 쉽게 성공한다.
그 반대가 돼야 노동자들의 조건도 방
어할 수 있다. 박근혜의 성과연봉제를
멈춰 세웠던 것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된 박근혜 퇴진 운동이 승리
한 덕분이 컸다. 그런데 이 운동의 초
기 도화선 노릇을 한 것은 철도노조가
선두에 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 개선
에 반대하면, 결국 자신들의 투쟁 명
분도 약화되기 십상이다. 투쟁으로 조
건 개선을 쟁취하는 것이 '불공정'하
고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는 정규
직에 대한 호봉제 공격이 벌어질 때나
승진 문제 등에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
있다. 이미 <경향신문>은 건강보험공
단 내 갈등을 다루며 정규직들의 '기득
권'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
: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
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
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산하 두 노조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상
담원의 직접고용을 지지하고 있다.
6월 15일에는 산하 노조들에 고객센터
직영화 지지 성명을 호소했다.

그러나 산하 단체인 건보공단 정규
직 노조 지도부의 문제적 태도에 대
해서 올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어떤 방
식으로든 공개 비판이 없는 것은 아쉽
다. 특히 공단 측이 '노노 갈등' 프레임을
적극 이용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연
대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비판과 설득
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속 노조 지도부
의 문제점을 회피하지 않을 때, 연대
호소도 설득력이 더 생길 수 있다. 그
러려면 좌파의 주장과 건강한 비판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과 EU는 왜 북아일랜드를
두고 갈등하는가?
- ★ 르노삼성,
활동가 징계·고소 강행
- ★ 페루 대선
도전에 직면한 페루 지배자들
- ★ 녀 달재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월 19일 돌봄총궐기(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집회를 준비 중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하루 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을 포함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교육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행부 측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초안)'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돌봄전담사들의 조건 개선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친다.

우선,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시간을 저녁 6시 이후로까지 연장한다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돌봄전담사의 83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전담사들을 6시간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일부 개선이기는 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을 괴롭혀 온 '공짜 노동' 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운영뿐 아니라 연간운영계획 작성, 간식 구입·관리, 방중 급식 관리, 특기적성 프로그램 관리, 공문 처리, 가정통신문



돌봄 노동 필요는 커지는데 정부는 돌봄전담사 헌신에만 의지해 온갖 노동을 떠넘기고 있다

등 70여 가지 행정 업무를 맡아 왔다. 시간제로 일하면서 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 돌봄 시간에도 짬짬이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결국 퇴근 후 공짜로 초과근무를 해야만 했다.

정부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 이 중 1시간을 행정 처리 시간으로 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동 돌봄 시

간도 저녁 6시 이후로까지 연장되는 것을 고려하면, 70여 가지 행정 업무와 돌봄 프로그램 준비, 교실 정리까지 1시간 내에 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아동을 여유롭게 맞이하고 프로그램을 연구할 시간은 하나도 없이, 어떻게 돌봄교실의 질을 높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돌봄전담사들은 이렇게 반발했다. "6시간은 하나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지, 돌봄 행정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감축' 요구는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당연히 돌봄교실의 학생수도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돌봄교실과 돌봄전담사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확대한다면서도, 이를 주로 겸용교실, 봉사인력으로 채우겠다는 계획뿐이다.

폭탄 돌리기

한편, 정부는 교사들이 맡아 온 돌봄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고 단기적으로는 '교무행정전담팀', 장기적으로는 '교내 돌봄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배치해 돌봄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만 봐서는 교사들이 돌봄 업무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8시간 전일제 전담사를 각 학교별로 1명씩 배치해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돌봄 행정 업무는 전일제 전담사 1명이 처리할 수 없는 양이라서 결국 각 교실별 돌봄전담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2년 전에 서울의 시간제 전담사들이 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226일간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반복될 공간이 크다.

그리고 돌봄전담사들이 다 메우지 못한 행정 업무는 교무행정전담팀의 관리자 몫이 될 텐데, 그 관리자는 교사들을 과연 내버려둘까? 중국에는 폭탄 돌리기처럼 업무가 교사들에게도 떠넘겨질 것이다.

결국 모든 전담사를 상시전일제화하고, 초등돌봄교실에 대대적인 재정을 투입해 인력과 전용교실을 확충해야, 교사들이 돌봄 행정업무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동 돌봄의 질 개선도 가능하다.

이처럼 돌봄전담사들과 교사들이 돌봄 업무를 서로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정 투입을 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정부에 더 많은 돌봄 지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뿐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정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폐기하고,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화를 포함한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투쟁할 예정이다. 이는 모든 노동계급에게 이로운 요구이다.

돌봄전담사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김태양 연세대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저임금, 공짜노동을 강요해 온 연세대 당국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처우가 그동안 얼마나 열악했는지 드러나고 있다.(관련 기사: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이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선호하는 한국어 교육기관 1위('세계문화협회' 선정)를 차지했을 정도로 대외 위상도 높다.

이런 위상은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노고 덕분이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직접 교재를 제작하고 교수법을 연구하는 등 수업 준비부터 공을 들인다. 시험 출제와 채점, 행정업무, 학생관리도 강사들의 몫이다.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 학생을 도와 은행 일을 봐주거나 보호자 자격으로 경찰서에 동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열악한 처우를 강요하며 강사들을 쥐어짜 왔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시급으로 2만 5000~3만 5000원을 받는다. 저임금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진 대학 시간강사 평균 시급 6만 6000원(2020년)에도 한참 못 미치고, 다른 대학 한국어 강사 시급(보통 3만~4만 원대)보다도 낮다.

또, 연세대 당국은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노동시간을 협소하게 규정해서, 실제 강의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업 준비 등 강의 외 노동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도 말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학생이 줄자 연세대 당국은 강의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임금을 보전해 주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 한국어학당 강사 인건비 총액이 30퍼센트나 삭감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원래부터 저임금이던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더한층 임금이 깎였다. 코로나 이후 근속이 30년인 강사도 연봉이 1400만원이다.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려고 많은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카페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한다.

그동안 연세대 당국은 대학 한국어 강사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핑계로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

부자 대학의 우선순위

2019년 서울대에서 한국어 강사들이 투쟁을 벌여 무기계약직이 된 뒤,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도 무기계약직이 됐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처우가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에게 강의시간을 배정하는 기준을 학교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강의시간을 학교 측이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무기계약직이 돼서 고용안정이 확보되더라도, 임금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그마저도 신청이 안 돼요. 열심히 노동해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그제 딱 저희예요."(최수근 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장)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노조를 만든

뒤로 자신감을 갖고 투쟁하고 있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시급을 3만~4만 원대로 인상하고, 강의 외 노동에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6월 4일에는 강사 50~60명이 연세대 당국에 압력을 넣기 위해 교섭장 앞 복도에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6월 11일에도 강사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연세대 학생들도 여기에 동참했고, 강사들이 무척 고무됐다.

연세대 당국은 교섭이 시작되고 7개월 동안 강사들의 요구를 무시하다가, 강사들이 투쟁에 나서자 처음으로 임금 인상안을 내놔다.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강사 연봉의 고작 1.5퍼센트를 인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세대는 적립금만 6371억원이나 되는 부자 대학이다. 2021년 연평균 등록금도 915만 원으로 전국 1, 2위를 다투 정도다. 연세유유·세브란스병원·부동산 임대 등 다양한 사업수익과 등록금을 합치면, 연세대 당국이 지난해 벌어들인 돈만 무려 9023억 원에 이른다.

최근 연세대 당국은 한국어학당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한국어학당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지었다. 한국어학당을 오가는 강사들은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우리한테 돈 쓰는 건 왜 이렇게 아까워할까"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

그간 연세대 당국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채 공간에 돈을 쌓아 두고는 교육과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지원에는 인색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한국어학당 강사들,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연세대 당국은 비대면 강의의 문제점들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관련 기사: '교육의 질 하락' 방치하는 연세대 당국). 한국어학당 강의 역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는 강의 운영은 강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 제공과도 연결된다. 크게 보면,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은 연세대 전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투쟁의 일부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6월 22일에도 항의 행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투쟁에 연대하길 바란다.